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개원의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 전경. 민평은 5월 단체들이 원형복원을 촉구하고 있는 옛 전남도청 본관(왼쪽에서 두번째)·별관·회의실, 상무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등 6개 건물로 구성된 복합 공간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선 앞두고 인위적 야권통합 없다 호남의 지지 받는 후보가 승리”

야당 대표에 듣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을 앞두고 “인위적인 야권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다만 “다자구도 속에서 대선 막판인 내년 10~11월에는 (정권 창출을 위한) 국민의 선택이 보일 것”이라고 말해 야권 통합의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인터뷰 전문 5면〉
다자 구도에서의 야권의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결국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대선 구도가 민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내다 봤다. 야권 대선 주자로서의 확장에 대해서는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고 중도 및 합리적 보수 진영에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 더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의 대선 승리 근거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호남 민심의 결집과 비호남 지역에서의 외연 확대가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당에 써늘해진 호남 민심에 대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으며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흐름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호남 주도 연립 정부론과 관련, 박 위원장은 “야권의 뿌리인 호남의 지지 없이는 야당의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호남의 몫과 가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호남의 몫과 가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90% 이상의 호남 민심의 결집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호남 소외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위원장은 “과거에는 구색이라도 갖췄는데 이제는 아예 내놓고 (호남 인맥을)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에서 호남 인맥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장외에서의 제4세력으로는 원내 교섭단체가 불가능하고,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더민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열린 정당인 국민의당에 합류, 정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함께 북·중·러의 연대를 우려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공 잠긴 ‘민평’... 중재자가 없다

〈민주평화교류원〉

5·18 총탄자국 등 원형복원 싸고 오월단체·전당측 첨예한 갈등
문화전당 개관 10개월 넘게 핵심시설 방치...내년 운영도 불투명
광주시·정치권·지역사회 원로들 머리 맞대고 협의 조정 나서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이 10개월 여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실상 묵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사회의 조정·중재기능 상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따르면 민주평화교류원(민평)이 10개월여 미개관 상태다. 지난해 9월 문화전당 부분 개관 이후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평을 제외한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창조원, 정보원 등 4개원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민평은 옛 전남도청 본관·전남지방경찰청 본관 등 6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거점이었던 옛 도청 본관 등에는 광주항쟁 10일간의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한 작품이 전시될 예정

이다. 현재 옛 도청·경찰청 본관과 회의실의 리모델링을 마쳤고 콘텐츠도 90% 가량 구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평 개관이 차질을 빚는 배경에는 원형 복원문제가 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진압군 총탄자국과 시민군 상황실 등을 원형복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복원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1년 6개월 가량 개관이 지연되는 점이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5월 단체와 문화전당측이 원칙만을 고수하는 탓에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그 산하 법인(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정치권, 문화관련 시민단체 등은 나란히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상항의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5월 단

체가 긴 문제이고 워낙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관여를 주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가 나서 ‘민평 논란’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전 통으로 계승하지 않는 점을 아쉬워 한다. 광주시,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09년 2년여를 끌었던 문화전당 내 옛 도청별관 철거-준지 논란을 사회적 합의로 일단락 지은 바 있기 때문이다.

개관 이듬해 연착륙해야 할 문화전당은 현재 비상사태나 나쁜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올 안으로 민평을 개관하지 못할 경우 내년 운영예산 배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다. 정부가 개관 여부가 불투명한 공간의 운영비를 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무성의·능직출동...뭇민을 경찰 ▶6면
미래산업 선도하는 영광군 ▶11면
KIA “5강 싸움은 지금부터” ▶20면

정부가 지난해 문화전당에 유치한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위원회 사무국의 개설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9월로 예정된 사무국 개설장소가 민평에 포함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주관하는 ‘2016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오는 21일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점도 아쉽게 됐다. 인권·민주·평화의 공간인 민주평화교류원의 전모를 공개할 수 없어서다.

문화계의 한 인사는 “5월 단체와 문화전당측을 중재할 수 있는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아 아쉽다”며 “문화수도 광주를 견인할 핵심 문화인프라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당 이은방 의원

시·도의회 원구성 마무리

제7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당 이은방(북구 6) 의원이 선출됐다. 광주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50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을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더민주 조오섭 의원과 함께 출마한 선거에서 이 의원은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체 22표 중 10표를 얻어 당선됐다.

〈관련기사 3면〉
1~3차 투표에서 두 의원 모두 10표씩 (기권·무효 2표)을 얻었지만,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이 의장을 맡게됐다. 신임 이 의장은 “양당체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의정단 선거가 지연되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이은방 광주시의장 임명규 전남도의회장

서 “앞으로는 협치의 정신으로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의장은 국민의당 박춘수(남구 3) 의원, 더민주 조세철(동구 2) 의원이 차지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를 열고 10대 후반기 의장에 임명규(보성 2·국민의당) 의원을 선출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